

대통령직 인수위,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

# “광역경제권 통한 균형발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경제권’을 통한 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은 정부 조직 개편과정에서 각종 규제·감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경제권 균형발전 정책은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자생력을 갖춘 300만~500만명을 포용하는 광역경제권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뤄내며 이 과정에서 수도권도 끌어안겠다는 것이다.

이는 참여정부가 펼쳐 온 시·군·구 단위의 특구 지정이나 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균형발전 정책과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인다.

박형준 인수위원은 28일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광역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방의 경제적 잠재력을 충분히 살려 메트로폴리스 급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인수위가 내놓을 광역경제권 개념의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지방분권을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진행하는 계획들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교육부의 경우 지방교육청으로 권한을 넘기는 방안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또 참여정부의 역점사업인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사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규제·감독 권한 지방 대폭 이양 정부·공기업 통·폐합 불가피

여기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은 다음달을 목표로 추진중인 정부조직개편 방안 마련시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의 한 핵심 위원은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지방분권도 같이 얘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이명박 당선자가 강조하는 신(新)발전체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

졌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중앙정부 권한 중 각종 규제·감독 권한의 지방 이양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자는 이미 선거 당시 교육부 권한인 자립형 사립고 지정권을 16개 시도 교육감에게 이전하는 등의 방안을 약속한 바 있다.

주호영 당선자 비서실장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정부조직 개편 방

향과 관련, “일정부분 통·폐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 들어 조직이 대단히 방만한 경향이 있다. 장관 자리도 많이 늘었다”면서 “심지어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공기업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아껴야 하고 여러 가지 혼선과 중복된 일을 하게 되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원칙만은 틀림 없다”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 작고 강한 정부를 만들자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착수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오른쪽)과 김형오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백성운 행정실장(오른쪽 두번째)과 박승준 기획조정위원(왼쪽)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부처 자랑 말고 공약실천 방안 내놔라”

### 인수위, 정부 업무보고 7대 지침 전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내년 초부터 시작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앞두고 7개 항목으로 구성된 보고서 작성지침을 만들어 각 부처에 전달하는 등 정권 인수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형오 부위원장은 이날 “어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공문으로 보냈다”며 “자기 부처 자랑만 하는 업무 보고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우선 각 부처의 가능, 연혁, 기구, 정원, 예산 등 일반현황을 첫 보고대상에 올렸다. 정부 조직개편과 공약이행 로드맵 작성을 위해서는 일반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또 정부의 주요정책 중 인수위가 계승하거나 추가할 부분을 선별하기 위해 5년간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도 담아줄 것을 주문했다. 인수위는 부처별 당면현안

을 5건 범위 내에서 보고해줄 것도 요구했다.

강승규 부대변인은 “불필요하거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부분, 낭비성 예산을 절감해 새로운 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내려보낸 지침”이라며 “이 항목은 이 당선자가 2002년 서울시장 취임 때도 예산점검을 위해 요구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이 당선자의 주요공약에 대한 실천계획을 연도별 로드맵 형태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이 당선자가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규제개혁 및 완화방안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창의적 혁신을 통한 예산 10% 절감방안 ▲산하기관 합리화 방안도 보고사항에 반드시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형식적으로 해왔던 업무보고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각 부처가 추진해온 현안이나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얼마나 이 당선자의 공약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부처별 예산절감 및 산하기관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는지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명박호 초대 총리 누구?

### 이경숙·정몽준·정운찬·박근혜 등 거론... 비서실장 3선의원·영입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연초 국무총리 및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예상 후보군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대 총리와 비서실장이 새 정부의 ‘색깔’을 규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징성이 큰 데다 향후 ‘권력지도’의 변화 흐름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 당선자 측근들은 “아직 본격 인선작업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며 선부터 ‘예측보도’ 자제를 당부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벌써부터 검토 가능한 후보군의 이름이 무성하게 오르내리는 등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 당선자의 정치철학과 국정비전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인물군에서 총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경숙 인수위원장,

정몽준 의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경선 라이벌이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총리직을 제안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당선자가 의외의 외부인사를 발탁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측근은 “벌써부터 총리 인선을 놓고 뭐라 할 단계는 아니지만 여러 면에서 새 정부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을 발탁하지 않겠느냐”고만 말했다.

총리보다 앞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비서실장 인사를 놓고도 말이 오가고 있다.

후보 시점부터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임태희 의원이 계속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부터 3선급 현역의원 중에서 발탁할 것이라는 설, 외부에서 영입할 것이라는 설 등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당선자가 조카시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제청장, 경찰청장 등 권력기관 ‘빅5’의 수장을 교체할 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교체, 임태희 검찰총장은 유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원장의 경우 이 당선자와 대북관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교체가 확실하지만 임 총장은 이 당선자의 BBK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리한 ‘공로’가 있는 만큼 임기를 채우지 않겠느냐는 것.

이택순 경찰청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를 보름 앞두고 임기가 만료된다는 점에서 비록 노 대통령 이 인사를 행하시지만 이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된 인물이 낙점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연합뉴스

# 임태희 실장 등 ‘안국포럼’ 전진 배치

### 이명박 당선자 비서실 진용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비서실의 진용이 28일 갖춰졌다.

비서실은 지난해 6월 말 서울시장 퇴임 이후 열었던 개인사무실인 시내 경지동 ‘안국포럼’의 식구들을 그대로 옮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측근들로 구성됐다. ‘인수위속 인수위’로 통하며 막강파위를 자랑하는 곳인 만큼 믿을 수 있는 ‘복심’들을 전진 배치한 것.

비서실은 현역의원인 임태희 비서실장과 정두언 보좌역, 주호영 대변인이 중심이 되고 그 밑에 총괄, 공보, 정부·기획 1, 정부·기획 2, 외교·의전, 정책기획 등 6개 팀으로 꾸려졌다. 임 실장은 경선 때 중립을 지켰으

나 경선 후 후보 비서실장을 맡아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이 당선자의 신임을 샀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이명박맨’이 됐다.

최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직책은 비서실 보좌역이지만 이 당선자와 인수위, 청와대를 오가며 당선자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종의 ‘리베로’ 역할을 맡은 셈이다.

경선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주호영 대변인은 이 당선자가 경선 당시 삼고초려해 모셔 온 인물로, 이 당선자의 취약지대인 불교계 표를 끌어오는 데 상당한 공을 세웠다.

팀장급 인사들도 모두 이 당선자의 의지를 정확히 꿰고 있는 핵심들이다.

/연합뉴스

총괄팀장에 내정된 박형준 전 서울시 정무담당 부국장은 11년간 이 당선자 친형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보좌관을 지내다가 지난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 후보비서실 부실장을 맡으며 ‘이명박맨’이 됐다.

정무·기획 1팀장인 신재민 전 조선일보 부국장은 경선 때 매일 아침 ‘대면(對面)보고’를 했던 핵심 가운데 핵심으로, 당선자의 메시지와 함께 여러 정무기능을 담당한다.

정무·기획 2팀장을 맡게 된 권택기 전 선대위 스케줄 팀장은 경선 때 후보를 대신해 ‘경선돌’ 협상 실무를 주도했던 당사자로, 이 당선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챙기는 인물이다.

/연합뉴스

# 맹형규 의원 광주일고 명예동문 추대

맹형규(한나라당 서울 송파갑·사진) 의원이 최근 광주 서중·일고총동창회로부터 명예동문으로 추대됐다.

맹 의원은 ‘학생의 날’의 명칭을

‘학생독립기념일’로 변경하는 등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살리는 데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동문으로 추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맹 의원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SONY New BRAVIA**

**고객감사축제**

행사기간 : 12월 1일(토) ~ 1월 6일(일)

30인치 프리미엄 컬러 LCD TV가도 바코를 거부합니다!!

0621-522-2000

전통의 맥류 미아기는 단정하고 빠르니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만일 수없는 새로운 선별하여 정성스런 미음을 차려드립니다.

0611-383-8283

**달양한과**